'D-7' 근로·자녀장려금… 31일 넘기면 장려금 10% 삭감

오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넘기면, 차후 신청해도 장려금의 10%가 삭감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은 5월말까지다.

정기 신청 이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은 10% 줄어든다.

12월 이후에는 신청해도 지급받을 수 없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비대면 신청만 이용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전용 ARS 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안 받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장려금에 대해 법정 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상위 2%, 다주택자는 상위 4%에 종부세"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검토하는 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넓게 잡아 차등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 특위가 종부세 개선안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한 4가지 가운데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나 당 지도부와 논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법안 최종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국세통계' 온라인 신청…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개통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부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NTS Datalab)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용 등을 신청하고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누리집에서 최종 분석 결과물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분야는 사업자세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이며 각 항목의 기초자료에서 특정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한 후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공한다.

2018년 6월 개소한 후 대학,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이 다양한 조세정책 연구·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과세정보와 다른 기관 보유자료간 결합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확대를 통해 공익목적의 국세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